

야권 빅뱅이나 찻잔속 태풍이나... 새정치 지도부에 달렸다



혼돈의 20대 총선

광주·전남 신당 파괴력은

내년 4·13 총선은 과거 어느 선거보다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야권 심장부인 호남지역 총선은 더더욱 변수가 많아졌다. 제1야당 지지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호남발 야권 신당이 잇따라 탄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6대 이후 총선 결과를 보면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갈라져 대결을 벌였던 17대 총선을 제외하고는 호남에는 제야당 독립점구도가 이어졌다. 지금도 호남 30석(광

주류-비주류 내분 못 막으면 호남 일당독점 깨질 수도 새정치 혁신 성공 비전 제시엔 '신당 효과' 물거품 될 듯

주·전남 19개, 전북 11개) 중에서 27석을 제1야당이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순천·곡성 7·30 재보선 때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당선됐지만 울초까지는 내년 호남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의 낙승을 예상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올 4·29 광주 서울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전정배 의원이 승리하면서 새정치연합에 대한 민심이반이 확인되고 천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 박주선 의원 등 몇몇 호남 유력 정치인들이 '반(反)새정치연합'의 깃발을

들고 신당 창당에 나서면서 호남 민심은 술렁이고 있다. 물론 이들 신당이 내년 호남 총선에서 새정치연합을 물리치고 1당이 되거나, 1당을 위협할 정도의 의석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아직 신당 세력은 호남에서 일당독점 구도를 깨거나 야권 대개편이라는 지형변화를 몰고올 정도로 파괴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신당의 성공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새정치연합이 내부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기 때문이다. 이 내분은 결국 분당으로 이어져 신당 세력에게 기회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따라서 신당의 성공 여부는 결국 새정치연합 지도부 즉, 문재인 대표에게 달렸다는 게 정치평론가들의 일반적 지적이다.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은 13일 "신당이 파괴력을 가지느냐 여부는 전적으로 문 대표와 친노(친노무현) 진영에 달렸다"며 "이들이 친노 위주의 당 운영을 계속하고 특히 내년 총선 공천마저 친노 위주로 이뤄진다면 신당 파괴력은 급상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즉, 문 대표가 현재 새정치연합 내 친노와 비노 간 갈등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추가 탈당 및 신당 합류가 이뤄지면 신당

은 새정치연합과 대등한 대결구도를 형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실제 신당 세력들은 창당 작업이 구체화되고 새정치연합 내 갈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하면 신당 합류 인사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위험 수위는 총선 공천과정에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신당 세력이 총선 직전 통합, 연대에 들어갈 경우 새정치연합과 대결구도는 더욱 선명하게 돼 호남에서 일당독점 구도를 위협할 것이 확실시된다. 물론, 문 대표만이 신당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신당 나름대로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원지코리아컨설팅'의 김병도 수석컨설턴트는 "신당이 현재 새정치연합의 실패에만 기대서는 성공하기 어렵다"며 "신당은

정권 정초의 비전을 보여주기 위해 대선주자급의 정치적 중립감을 가진 인사들과 개혁성을 갖춘 현역 국회의원들의 합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신당이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사들을 발굴하지 못하고 차별화된 정치·정책적 콘텐츠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당 바람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전망이다. 또 반대로 새정치연합 문 대표가 당 혁신에 성공하고 새로운 인재를 발굴, 공천하는 등 새로운 면을 보여주며 대선 승리의 비전을 제시한다면 신당이 세력을 불리지 못하고 결국 군소정당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결국 정치권으로 넘어간 '공'... 또 선거 코앞 줄속 타결?

총선 선거구 확정안 결정 불발 확정위, 국회제출 시한 못지켜 여야 입장차...기한내 합의 난망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가 획정안 국회 제출 법정시한인 13일을 지키지 못해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공'이 다시 정치권으로 넘어갔다. 획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지만 획정기준에 대한 여야간 구체적 합의가 없으면 획정위 활동은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획정위는 이날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회에 정치적 결단을 촉구했다.

김대년 획정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발표한 '대국민 사과문'에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정치권을 향해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지도록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정치적 결단을 발휘해 주길 국민과 함께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약속 못지켜 송구”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이 13일 오후 국회 정문관에서 입장발표를 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성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획정위는 선거구 구역표가 확정돼 효력을 발생하는 날까지 유지된다. 국회에서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등을 조율하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다음 회의 일정은 못 잡았고 (다시 회의를 열려면) 획정위원들과 상의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 정점인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 권역별 의석 배분, 농어촌 배려 방안 등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을 때까지 사실상 획정위 활동은 중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획정위는 애초 여야가 선거구획정 가이드라인 마련에 실패하자 지난 2개월 동안 자체 획정기준을 마련해 이를 토대로 획정작업을 벌여왔지만 위원 간에 의견이 맞서 이날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결국 정치권에서 여야가 지역구·비례대표 수 등 쟁점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 '꼬인 매듭'을 풀어줘야 획정위가 선거구획정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만간 진전된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

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한편, 새누리당은 내년 4·13 총선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지역구 의원 수를 '259개'와 '250개'로 전제된 2가지 협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지역구 수 259개 안의 경우 지역구 수를 현행보다 13석 늘리는 만큼 인구 하한 미달인 농촌 선거구가 밀집해 최소 2석 감소가 불가피한 경북을 제외하면 영호남에서 줄어드는 농어촌 지역구가 아예 안 생기도록 했다. 지역구수 250개안은 인구 상·하한선 산정 방식을 변경함으로써 그동안 정치권에서 터져나온 요구들을 상당수 반영

하는 특징이 있다. 이에 앞서 새정치연합은 여당과의 협상에 대비, 최근 '지역구 249개(의원정수 303명)'와 '지역구 246개(의원정수 300명)'를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결국 새누리당의 지역구 250개안과 새정치연합의 249개안을 놓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다가 한 자릿수만큼 비례대표를 줄이거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쪽으로 절충을 시도할 게 아니냐는 관측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국회의원 회동 “의석수 감소 막을 뾰족한 대책 없네요”

내년 총선 선거구 확정과 관련, 광주의 국회의원 의석수가 1석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광주 국회의원들이 13일 회동에서 나섰지만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강기정 의원은 "현재 광주의 의석수를 유지하려면 현재의 관결을 무효화하거나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에 따라, 국회 정계특위와 중앙 선관위 선거구획정위의 논의 결과를 좀 더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동철 의원은 "현재 광주 의석수를 유지해야 한다고 나서기가 옹색한 상황"이라며 "과거 구간 경계조정에 대한 아쉬움도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 기준을 3대1에서 2대1로 결정할 것을 누가 예측했겠느냐"는 입장을 나타냈다.

임내현 의원도 "광주의 의석수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강력하게 나설 경우, 타 지역의 반발 등 오히려 역풍이 올 수도 있다"며 "답답하지만 현재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새정치연합 광주 국회의원들의 입장은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이 내놓은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광주시당은 지난 8일 "호남 정치 1번지인 동구가 처한 현실은 호남 정치권의 위기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며 "부산·울산·대전 등 타 광역시의 의석수는 유지·확대되는 반면 광주만 줄어가는 것은 노골적 지역차별"이라고 절대 불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한편, 동구의 인구 하한선 붕괴와 관련, 지난 2010년 동구와 북구의 구간 경계조정이 부상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강기정 의원은 "당시 여론조사 결과, 경계조정 대상으로 거론됐던 북구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70%가 넘었다. 북구의회와 행정자치부의 반대가 강력해서 현실적으로 대폭적인 경계조정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명품 보성 컨트리클럽

국내 최초

골프동호회 카드 출시!!

선착순 100구좌 한정 판매

지금부터 파격적인 혜택을 누리세요!

무기명 1팀-에메랄드카드, 무기명 7팀-토파즈카드

대상 골프동호회

- 동창회 동호회
- 기업체 동호회
- 인터넷 동호회
- 스크린 동호회
- 골프연습장 동호회
- 기타 각종 동호회

동호회 토파즈카드

1,000만원 1일 7팀 사용가능

성수기(4월~11월) - 그린피 주중 30% / 일요일 25% 할인
비수기(12월~3월) - 그린피 주중 40% / 일요일 30% 할인

보성CC 에메랄드카드

1,000만원 1일 무기명 1팀 사용

그린피 주중 40% / 주말 30% 할인

보성컨트리클럽 전라남도 보성군 조생면 조생3길 338
www.bosungcc.co.kr

상담 문의 광주사무소 062.654-0711
보성CC 061.804-1046

